



윤석열 퇴진 운동은 정당하다



사찰, 주민조사 등

인기 없는 윤석열이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이 대중의 커다란 불신을 받고 있다. 고작 취임 6개월 만이다.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도 최하위권이다. 주류 언론의 악의적 무시에도 불구하고 벌써 서울 도심에서 수만 명 규모의 정권 퇴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그 기저에는 생계비 위기를 겪는 보통 사람들의 광범한 고통과 불만이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지배계급을 대표해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 등 서민층에 전가해야 한다. 그래서 더욱 억압과 통제를 강화해 왔다. 민주당 압수수색, '범죄와의 전쟁' 선포, 집시법 개악, 네 차례 국가보안법 탄압, 경찰력 강화, 언론 길들이기 시도 등이 그것이다.

이태원 참사는 바로 윤석열의 권위주의 강화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다. (관련 기사: 본지 440호 '윤석열과 경찰, 이태원 참사')

최근 광범한 사찰 정황도 포착된다.

SBS는 얼마 전 경찰이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사찰을 벌인 정황을 폭로했다. 국회 협력관의 활동을 파악해 오라는 경찰청 정보국의 내부 문건에는 "논란 소지 없도록 파악 부탁한다"는 당부도 있었다. 수년간 진행해 온 <노동자 연대> 거리가관들에도 최근 사복 경찰들이 찾아왔다.

또, 한 달 전부터는 '전 국민 대상 주



서민 통제 더 짝 죄는 윤석열 강력한 서민 감시 제도는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다

민등록 사실조사'를 이유로 통장들이 가가호호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일일이 조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실시"하고,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그래서 일부 통장들은 늦은 저녁에까지 찾아와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며 집요하게 대면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 조사가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히 하고, '수원 세 모녀'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 그래도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국가가 국민들의 정

보를 많이 수집·관리하는 나라다. 주민등록표상에 국가가 관리하는 개인 정보가 100가지가 넘는다. 17세 이상 국민이면 지문과 같은 생체 정보도 국가에 제출해야 한다. 날인된 지문은 경찰청이 보관하는데, 사실상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

또, 주민등록의 신고나 관리 등에 통장이나 이장 같은 최말단의 관리자를 투입해서 생활 공간 내에서 밀착 감시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런 강력한 주민 감시 제도는 군사 독재 정권의 유산이다. 간첩이나 '불순 분자'를 용이하게 색출·식별하고 효과적으로 민중을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서구 대부분의 나라들은 납세나 선거 등 사안별로 행정적 필요에 따라 주민 등록을 한다. 한국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로 광범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게다가 요새는 부동산 계약, 온라인 쇼핑 등 각종 경제 활동부터 핸드폰 개통에 이르기까지 민간에서도 광범하게 실명 연락처를 요구하고 있어, 본명으로 생활하지 않으면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는다. 그런데도 가가호호 방문해서 더한층 강력한 조사를 벌이는 목적이 의심스럽다.

한편, 정부가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조사 이유로 대는 것은 정말 파렴치하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이 나라 복지의 절대적 부족과, 이로 인한 까다로운 선별, 잦은 탈락 위기, 그래서 취약계층이 복지 자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긴축을 추진하며 노동자·서민 대중의 삶을 공격하고 알량한 복지마저 깎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 정책은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확대할 것이다.

위기가 심화하고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이 커질수록 정부는 권위주의적 수단들에 더욱 의존할 것이다.

성지현

안산 세월호 지원금 논란

청년 단체 마녀사냥해 민주당 흠집 내려는 우파

김승주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등 여러 난제 속에서 국민의힘과 <조선일보> 등 우파가 또다시 '종북'을 꺼내 들었다.

11월 12일 국민의힘 의원 서범수와 <조선일보>는 2017년부터 6년 동안 정부와 경기도가 지급한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금을 안산시가 유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돈이 '종북' 세력에게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안산시가 지원금을 준 시민단체 중 한 곳(안산청년회)이 북한에 관한 세미나를 하고 '평양 갈

래?'라고 적힌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설치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안산 주민들이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금을 받아 원하는 사상을 공부하고 평화로운 정치 활동을 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에 대한 공격은 사상의 자유 침해다.

막대한 국가 지원금에 기생하면서 패악질을 일삼아 온 것은 오히려 관변 보수 단체들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 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 단체는 517억 원에 이르는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동

원해 극우 집회를 열고, 세월호 유가족의 농성장을 습격하기도 했다.

반면에 국민의힘과 <조선일보>가 제기하는 의혹은 소규모 시민단체들의 체험 학습, 강연, 음악회 등과 500만 원 상당의 지출 내역이 누락된 것 등 사소한 잘못들이다.

마녀사냥

국민의힘과 우파는 이번 논란으로 특히, 민주당과 이재명을 '종북'과 연계된 세력이라고 흠집 내려 한다.

세월호 지원금이 지급된 기간에 안산시장들이 모두 민주당 소속(제종길,

윤화섭)이었기 때문이다. 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지사는 이재명이었다.

윤석열과 우파들은 아님 말고 식으로 이재명을 '종북 주사파'로 몰아 왔다. 윤석열이 '주사파와는 협치가 없다'고 발언한 직후 이재명을 겨냥한 민주당사 압수수색이 벌어졌다.

몇 번이나 집권 경험이 있는 제1야당과 당대표가 '종북 주사파'라는 공격은 황당하다. 그럼에도 우파들에게 '종북' 물이는 유용하다.

'종북' 마녀사냥은 지지 세력을 결집

▶ 3면으로 이어짐

이렇게 생각한다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

윤석열 정부가 명단 공개 막은 것이 진정한 문제다

한 인터넷 언론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보도하자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조선일보> 등 우파들이 일제히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폭력”, “유족에 대한 끔찍한 테러” 운운하며 위선을 떨고 있다.

그러나 명단을 공개한 쪽이 아니라 명단 공개를 반대한 윤석열 정부가 문제이자 원인 제공자이다.

정부는 위패도 영정도 없는 분향소를 전광석화로 차렸다가 접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한 번도 유가족의 의사를 묻은 적이 없다. 그저 하루 빨리 이태원 참사 정국에서 벗어나고 싶어 안달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유가족의 의사를 존중하기는커녕 유가족을 통제하고 회유할 생각뿐이었다는 것은 경찰이 작성한 사찰 문서에서 드러난 바 있다.

그런데 정부와 집권당과 우파가 위선적인 역공을 펴는 상황에서, 좌파 일각에서도 유가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는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주요 사례다. 또한 언론노조는 “심각한 보도 윤리 불감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참사의 진정한 책임자인 윤석열에 맞선 운동을 확대해 나가



윤석열은 한 번이라도 유가족 의사 묻은 적 있었나 위패도 영정도 없는 분향소

야 할 시점에, 희생자 명단 공개 문제를 윤석열의 책임 문제 못지 않게 큰 잘못된 양 비판하는 것은 본말전도이다.

물론 유가족 동의 없이 명단을 전부 공개한 것은 실수였다. 유족 중 일부는 희생자의 이름을 찾아주고 싶어 할 수 있지만, 다른 일부는 원하지 않을 수 있는 등 유족들이 명단 공개에 동의한 입장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윤석열에 맞선 항의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작은 실수다.

158명의 참혹한 희생을 낳고 유가

족을 고통에 빠뜨린 진짜 가해자(윤석열)는 따로 있다. 이들에 대한 비판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희생자 명단 공개를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분별 있는 행동 같지 않다.

명단 공개로 우파의 악성 비난과 혐오 표현으로부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유족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 순서상으로) 두 번째 가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명단 공개는 윤석열 정부의 ‘1차 가해’와 비교할 바가 못 된다. 게다가 명단 공개 측이 ‘1차 가해’ — 진정한 가해 — 세력에 반대해 싸우고 있다는 점에서 ‘2차 가해’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편,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집단으로든 개별로든) 윤석열 반대 운동에 참가하는 것은 소중한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운동이 꼭 유가족을 중심에 놓고 — 즉, 그들이 이끌어 — 건설돼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퇴진해야 할 이유에는 이태원 참사라는 커다란 비극뿐 아니라, 과거의 참사와 재해, 앞으로의 참사와 재해 등으로 피해 입고 희생될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자·서민의 생계를 악화시키고, 호전적 정책으로 대중의 삶을 위협하게 만들고, 민주적 권리를 공격하는 등 수많은 악행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석열에 확고하게 반대하는 대중 운동이 필요하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법치를 내세워 제1 야당을 압박하고(이재명 대선자금 수사), 보안법 탄압을 하는 등 권위주의를 강화하며 윤석열 반대 세력을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퇴진 운동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때이다.

▶ 2면에서 이어짐

시키고 이반하지 못하게 단속하는 카드로는 여전히 유용하다. 또한 좌파와 노동운동을 겨냥한 위협이자 분열 책략이기도 하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북한 연구자, 통일운동가 등 좌파에 대한 보안법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 우파들은 ‘민주당과 이재명은 종북과 연결된 부패 위선자’라는 메시지를 부각해, 정권을 교체해 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을 부추기려 한다.(관련 기사 6, 7면)

그럼으로써 윤석열 퇴진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윤석열 퇴진 운동에도 흠집을 내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지금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대장동 수사에서 ‘의혹만으로 유죄’식으로 이재명 주변 인물들을 구속하고 민주당사와 국회 본청에 있는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며 야당을 밀어붙이고 있다.(관련 기사 11면)

국민의힘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의 정당이자 피해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모욕했던 장본인이었다. 땅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대장동 공공개발 추진을 가로막은 것도 국민의힘이었다.

이 지독하게 위선적인 우파들이 세월호 운동과 윤석열 퇴진 운동에 먹칠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三

朝鮮日報

[단독] 세월호 피해 지원금 시민단체
황당 사용... 감사원, 안산시 감사

三

朝鮮日報

세월호 지원 2500만원 받은
안산청년회 “남북관계 파탄원인은
미국의 내정간섭”

정의당·진보당은 퇴진 운동을 지지해야

박설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다시 20퍼센트 대로 떨어졌다. 윤석열은 취임 몇 달 뒤부터 줄곧 이 수준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해 왔다.

“[정부가] 독단적이어서”라는 부정 평가 이유 1위가 눈길을 끈다. 이태원 참사 전후로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능히 그렇게 생각했을 법하다.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에 정부 책임은 없다며 꼬리 자르기 수사를 본격화했다.

민주당사 압수수색 등 사정의 칼을 버리고, MBC 취재 제약, TBS 지원 중단, YTN 지분 매각 등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

유가족과 시민단체에 대한 사찰, 민족 자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 윤석열 퇴진을 효과적으로 주장한 <노동자 연대> 신문 판매 사찰 등도 이어졌다.

이런 일들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이유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번 참사는 윤석열의 공권력 사용 우선순위가 낡은 비극이다. (관련 기사: 본지 440호 ‘윤석열과 경찰, 이태원 참사’)

정부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려고 서민 통제와 권위주의를 강화해 왔다. 윤석열의 직간접적 지시와 정책 방향에 따라 치안·행정의 배치도 ‘마약과의 전쟁’, 집회 통제에 집중됐다. 그러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을 내팽개친 것이다.

참사 당일 치안·행정 책임자들이 보인 극도의 무사안일과 무능은 정부의 행정안전 정책 기조와 치안 우선순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그 최고 수장인 윤석열이 꼬리 자르기로 책임을 회피하고 빠져나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윤석열은 이미 지난 6개월간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심각하게 망쳐 왔다. 물가 앙등으로 인한 생계비 위기, 치솟는 금리로 커져가는 가계 부채 부담 등 서민층의 고통이 심각하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 3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이 와중에 정부는 대기업·부자들에게는 천문학적인 감세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는 공공요금을 또 올리고 복지를 축소하고 임금을 더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수만 명이 참가하는 윤석열 퇴진 집회가 수주째 열리고 있다. 11월 12일 윤석열 퇴진 집회

윤석열은 노동 개악, 연금 개악, 공공 부문 민영화와 인력 감축 등 신자유주의 공세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파리 바게뜨 노동자 등 산재 사망이 줄 잇는 데도 알량한 중대재해처벌법마저 개악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나토의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폴란드와 체코에 무기를 판매하고, 미국과 포탄 수출을 협의 중이다. 또, 동유럽에 핵발전을 수출하면서 세계를 더한층 위험천만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윤석열을 물러나게 하지 않으면, 대중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윤석열을 정조준해 퇴진운동을 강화하고 투쟁을 보편화(정치화)해야 하는 이유다.

좌파 정당들의 대응

이 점에서, 정의당이 “국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추모는 국정조사”(이정미 대

표)라며 국정조사 요구를 다른 무엇보다 앞세우는 것은 본말전도다.

이는 대중의 관심사를 의회로 가져오게 만들어서 대중을 구경꾼으로 만들고 자체 활동을 부차화시킬 수 있다.

더구나 대통령의 지시 책임이 이미 확인된 마당에 진상 규명을 강조하는 식은 자칫 대통령 책임론을 희석시키고 저들이 시간을 벌게 해 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사실 정의당은 윤석열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의 개혁 염원 배신에 광범한 저항을 건설해 대응하지 않고, 민주당과 개혁 공조를 하는 노선을 추구하다가 신뢰의 위기에 처했다.

그 뼈아픈 교훈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정의당의 재창당 노력은 윤석열 정권의 공세에 맞선 대중 투쟁의 강화에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진보당은 윤석열 책임을 말하지만,

다음 총선에서 심판하자며 기존의 퇴진 운동과 선을 긋고 점진론적 접근을 하고 있다. 참사 관련 각료 해임을 촉구하던 진보당은 11월 18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이마저 외면한다면 “정권 퇴진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면서 말이다.

태세 전환을 암시했지만, 상황을 추수하는 경향은 여전하다. 진보당은 아마도 퇴진을 요구할 만큼 아직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동력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대중의 불만을 결집시키고 동원하고 이끌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를 거세게 몰아칠 기회를 놓친다면, 1년 반 뒤 총선에서 그를 심판할 수 있을까? 이태원 참사 후에도 물러서지 않는 윤석열에게 한숨 돌릴 틈마저 주면 그다음에 반격을 예상해야 한다. 경제 위기가 급작스럽게 심화될 공산이 큰 상황에서 윤석열은 탄압을 더한층 강화하며 공격에 나설 것이다. (관련 기사: 본지 441호 ‘윤석열 ‘심판’론의 문제점 — 시간은 우리 편이 기만 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노동자 등 서민층의 분노가 큰 지금이 기회다.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규탄하고 매주 만만찮은 규모로 퇴진 촉구 행동이 열리고 있다.

이런 분노가 윤석열을 정면 겨냥한 더 광범한 대중 투쟁으로 성장하도록 애써야 한다.



대통령 책임이 확인된 마당에 국정조사로 진상규명을 강조하는 것은 대통령 책임론을 흐리는 효과를 낸다

윤석열 심판론의 문제

그때까지 시간은 우리 편이기만 한가?

좌파 일각에서 윤석열 심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들은 일찍부터 윤석열 퇴진 촛불에 참가해 왔지만, 공식적으로 윤석열 퇴진 요구를 내놓고 있지 않다.

특히 진보당의 경우에는, 윤석열 퇴진 운동이 민주당 좋은 일 시킬 뿐이라고 봐서 그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진보당의 전통적인 전략(역사적인 용어로 인민전선)은 국민의힘 같은 우파 정당을 권좌에서 밀어내고 민주당 같은 중도 자유주의 정당과 연합해서 집권하는 상황을 결국 지향하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직후 진보당의 한 간부는 이렇게 술회했다. “진보당 후보가 표를 많이 얻으면서도 이재명이 윤석열에게 이기는 결과를 기대했는데 둘 다 이루지 못해 아쉽다.”

사실, 참사 정국에서 진보당의 대정부 요구는 민주당의 요구와 대동소이하다: 대통령 책임, 행안부 장관 파면, 국정조사, 특별조사위 구성, 특검 실시.

진보당이 윤석열 퇴진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운동의 동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에서 윤석열 퇴진 운동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해서인 듯하다.

진보당은 노동조합 기반이 만만찮은 대중 정당이므로 퇴진 투쟁의 동력을 건설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정당인데도 수동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당은 지지율 위기를 겪고 있는 윤석열을 상대로 계속 투쟁하면서(이를 “광장 정치”라고 부르고 있다) 2024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거리 투쟁을 유지하되, 투쟁의 성과는 진보당에 대한 득표로 집약돼야 한다는 전략이다.

‘사업 계획’에서 나타난 진보당의 전망을 요약하면 이렇다: 윤석열이 임기 초반에 역대급 지지율 위기를 겪고 있다. 윤석열의 정치 위기가 지속되도록 일정 수준의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그러면 (1년 5개월 뒤) 2024년 총선에서 진보당이 선전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의 근거에는 그때까지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발상이 있다. 그러나 이런 진화적인 발상으로는 역동적인 정치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총선 때까지 정치 상황이 윤석열에게 불리한 쪽으로만 발전하리라는 보장이



11월 17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진보당

어디에 있는가. 인기 없는 대통령이지만 윤석열이 샌드백은 아니다. 운동이 기회를 놓치면 윤석열도 바로 받아치기를 할 수 있다.

예컨대 2008년 촛불 운동이 6월 10일 100만 집회 참가 후 (퇴진이 아니라) 심판론으로 투쟁의 열기가 식자, 7월 초에 이명박은 반격에 나섰다. 그런 여파 속에서 2009년 1월 용산 참사는 비극적 살인 진압도 벌어졌다.

또한 비록 이런 매우 나쁜 시나리오는 아니더라도 그저 민주당만이 운동의 수혜자가 되고 진보·좌파 세력은 수혜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

민중주의 전략

윤석열 심판론은 어떤 당을 통해 윤석열을 심판할 것이냐는 문제를 던진다. 아래로부터의 거대한 운동이 벌어지지 않고서는 정의당이나 진보당 또는 두 당의 연합만으로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패퇴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

다.

진보당은 민주당을 윤석열 심판의 도구라고 실제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윤석열 심판 구호에는 민주당의 존재가 암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08년 촛불 운동에서도 이명박 퇴진 요구 대신에 이명박 심판론이 제출됐다.

그런데 그 ‘심판’은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제휴로 나타났다.

2012년 대선에서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박근혜를 떨어뜨리기 위해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며 투표 직전에 자진 사퇴했다.

진보당이 윤석열 퇴진 촛불 운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보당이 민중주의(진보 포퓰리즘) 전략을 폐기했다는 뜻은 아니다.

물론 진보당이 민주당과 반국힘 동맹 전략을 추진한다는 것과 그 전략이 실제로 가동되느냐는 별개 문제다.

민주당이 지배계급의 부정적 시선을

의식해 진보당과의 제휴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급조한 비례 위성 정당에 진보당이 참가하는 것을 거부했다.

투쟁을 선거에 종속시키기

윤석열 심판론은 선거를 대중투쟁보다 우위에 놓는 것(선거주의)이다. 현재 진보당과 정의당 등 좌파 정당들은(노동당도) 모두 2024년 총선을 향해 종종 걸음을 치고 있다.

자본주의하의 선거에는 막대한 자금과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본가들의 지지를 받는 명시적 자본주의 정당들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정치 과정의 일환이다.

반면, 대중 투쟁이 분출해 새로운 정치 바람이 불지 않는 한 좌파 정당에는 매우 불리한 영역이다.

선거를 당 활동의 중심에 두는 정당들은 소규모일수록 오히려 일찍부터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압력을 크게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등장한 투쟁은 자신들이 미리 설계한 선거 마스터플랜과 충돌할 수 있다. 대중 투쟁과 선거의 동학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선거의 경우 후보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유권자든 농촌 연계 소도시에 거주하는 유권자든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므로) 자기 선거구에서 개별 유권자를 만나면서 인지도를 높이는 활동을 수년 동안 해야 한다.

반면, 대중 투쟁은 그 특성상 본질적으로 대도시적 성격을 띠고, (시위든 파업이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참가자들을 집중시켜야 하므로 대개 되도록 대도시의 상징적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크게 일어나면 대중 시위는 수도나 대도시에 대한 상징적 점거처럼 비칠 수도 있다.

그래서 대중 투쟁 방식이 윤석열을 반대하는 데서 비할 데 없이 효과적이다.

반대로, 당면한 투쟁을 멀찍이 떨어져 있는 총선 때까지 유예시키는 ‘심판론’은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수동적 투쟁 수단이자, 자칫 윤석열에게 반격의 시간을 벌어 주거나 아니면 단지 민주당만이 득을 볼 것이다.

김인식 본지 발행인

정권이 바뀐들 민주당일 텐데 뭐가 달라지겠냐고?

김문성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윤석열 퇴진 구호를 헤드라인으로 내건 본지 최신호의 도심 거리 판매는 평소보다 크게 늘었고, 많은 격려와 후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에 염증을 느끼면서도 퇴진 운동 동참에는 회의적인 정서도 일각에 있다. 촛불로 집권한 문재인에게 대중이 실망해 윤석열이 들어선 것을 떠올려 보면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정권을 바꿔도 또다시 실망과 환멸이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인 듯하다. 쓰라린 대안 부재감의 반영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국유자산 매각 민영화 계획,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시도, 대통령 경호처의 군경 지휘권 확보 등을 발표했다. 지배계급이 겪는 경제·정치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윤석열은 웬만한 압력을 밑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권 반대 운동을 전진시키는 것은 더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운동의 전진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하의 경험을 돌아봐야 한다.

박근혜 퇴진 운동과 문재인 정부

박근혜를 퇴진케 한 위대한 운동은 (의회 탄핵과 현재의 인용이라는) 헌정 질서 안에서 박근혜를 쫓아내고 대선을 치르는 것으로 흘러갔고, 그 불가피한 결과는 문재인 정부였다.

스스로의 정치세력화를 통한, 민주당 정부보다 나은 정부로의 권력 교체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노동계급의 의식과 조직이 당시에 그 수준까지는 준비돼 있지 못했고, 운동 속에서도 그 수준으로까지는 고양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는 당시 좌파가 그 운동의 성격을 반부패 민주주의 투쟁에서 노동계급 계급투쟁으로 심화시킬 의식과 조직을 갖추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대중의 정권 교체·개혁 염원과, 지배계급의 정치 안정 추구가 타협한 결과였다.

지배계급은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집권이라는 양보를 통해 대중을 달래는 한편, 한국 자본주의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 노력을 서둘러 재개하고 싶어 했다.



의식과 조직의 성장 8만 명이 참가한 2018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는 처음에 둘 사이에서 줄타기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지배계급의 기대에 충실하고자 한 정부였다.

필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촛불 정부 코스프레에 환상을 갖지 않고, 더 나은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는 노동계급답게 계급투쟁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본지는 문재인 정부에 환상을 갖지 말자는 촉구와 함께, 개혁주의 노조 지도층과 개혁주의 정치인들의 온건함을 넘어 투쟁을 전개하자고 제안했었다.

가능성과 선택

이런 일들은 불가능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초반부에 민주노총·정의당·진보당의 조직들이 모두 성장했고, 정의당의 전국 선거 득표도 크게 늘었다.

문재인이 약속한 공공부문 노동개혁이 틀어질 조짐을 보이자 2018년 6월 민주노총 조합원 8만 명이 광화문에 모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경사노위를 설립해 노동개약을 추진하려 하고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려 하자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그 안전을 부결시켜 버렸다.

불법 촬영 근절을 요구하며 청년 여

성 수만 명("불편한 용기")이 수개월 동안 거리 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진보 좌파'(온건 좌파)의 개혁주의적 지도부들은 아래로부터의 운동들이 정부를 반대하지 않도록 무마하고, 개혁 입법(을 위한 조건)을 기다려 보자면서 기회를 낭비했다.

문재인의 역주행을 비판하다가도 우파에 유리하게 이용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금세 입을 다물었다.

심지어 계급적 특권 행사에도 당당하게 나와 청년들의 공분을 산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을 방어하기까지 했다.

운동과 정부의 중요한 충돌 때마다 중간에서 좌충우돌을 거듭하며 정부와의 대결을 회피하고 문재인인의 왼쪽에 철저히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결과, 노동 대중의 변화 염원은 문재인 정부하에서 더 급진화되기는커녕 대안 부재감을 느끼며 사기 저하되고 방향감을 잃었다.

그래서 지난 대선 국면쯤에는 민주노총과 좌파의 정치적 존재감이 크게 약화됐고, 노동 대중은 대부분 민주당 후보 이재명이 개혁을 선사해 주길 바라며 한 표를 행사하는 것으로 개혁 염원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우파는 "운동권 내로남불" 운운하며 이런 사기 저하와 환멸로부터 반사이익

을 얻었다.

지금도 윤석열 정부는 의도적으로 이런 진흙탕 프레임을 조장해 윤석열 반대 정서를 희석시키려고 한다.

대장동 수사만 봐도 그렇다. 여러 보도를 종합하면, 이재명 측근들에 대한 압수수색·구속 영장들은 앞으로 검찰의 의심과 추정을 입증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압수수색·구속 영장 발부는 실체가 불명확한 의혹만으로 부패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는 효과를 낸다.

국가보안법 탄압도 "주사파(민주당 이재명 지도부를 가리킴)와는 협치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본인의 거짓 비방과 선전포고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2~3면에 실린 관련 기사들을 보시오.)

퇴진 운동을 키워야

지금까지 보았듯이,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 윤석열 집권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결코 필연이 아니었다. 촛불 운동이 헛짚한 것이 아니라, 그 뒤 문재인 정부에 맞선 투쟁을 하기를 회피한 온건 좌파의 개혁주의적 지도부들이 행한 잘못된 선택(전략)이 문제였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개혁주의 지도

▶ 7면으로 이어짐

박근혜 퇴진 촛불은 들지 말았어야 했나?

김인식

윤석열 퇴진 운동이 벌어지자 일부 좌파는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보고도 또다시 퇴진 투쟁이냐고 비판한다. 그 일부는 더 나아가,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들지 말았어야 했다고까지 주장한다.

이런 대중 투쟁 무용론은 국민의힘의 주장과 묘하게 오버랩돼 씁쓸하다.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군중 심리를 자극해 정권 탈취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한다.

먼저, 박근혜 퇴진 운동과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 사이에 전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선후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면 안 된다.

박근혜 퇴진 운동은 민주당에 의한 운동 또는 민주당을 위한 운동이 아니었다.

민주당은 처음에 박근혜 퇴진 요구를 지지하지 않았다. 심지어 2016년 11월 12일 100만 명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요구할 때도 당시 민주당 대표 추미애는 박근혜와 영수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그 뒤 박근혜 퇴진 운동에 참가했을 때조차 민주당은 바로 탄핵 절차를 밟았다. 퇴진 운동이 헌정 질서의 틀을 벗어날 수 없도록 제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탄핵 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퇴진 운동은 석 달 동안 수십만 명 규모로 지속됐다.

불가피

박근혜 탄핵 뒤에 치러진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이것은 당시 세력 균형하에서 불가피한 일이었다.

박근혜 퇴진 운동은, 그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자체의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다만, 스스로 그 목적을 현실로 만드는 데 필요한 자신감과 정치적 수단들은 아직은 미성숙했다. 덕분에 민주당



박근혜 퇴진 운동 이 운동은 민주당에 의한 또는 민주당을 위한 운동이 아니었다

이 그 성과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거의 어부지리였다.)

퇴진 운동이 대규모로 일어났지만, 좌파 정부를 당선시킬 정도로 높은 수위로 발전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당시 세력 균형, 노동계급 대중의 의식(특히 자신감과 조직 수준)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박근혜 퇴진 운동이 혁명에 조금 못 미치는 격변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적었다. '촛불 혁명'은 은유적 표현이지, 운동의 성격을 이론적으로 규정하는 용어는 아니다.

그럼에도 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가 계엄령 문건을 준비했던 데서 볼 수 있듯이,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이 부결됐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됐을지 모를 일이다.

국가기구가 결코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결정을 당시에 예정된 결론처럼 말할 수는 없었다. 탄핵 인용이 이뤄진 것은 민주당이 거리에서 힘을 뺀 뒤에도 마지막까지 거리를 지킨 대중 운동 덕분이었다.

대중 운동의 효과

그러면 박근혜 퇴진 운동은 문재인과 민주당 집권 말고는 남긴 게 없는 운동이었는가?

그렇지 않다. 박근혜 퇴진 운동은 수백만 명이 참가하는 대중운동이었던 덕분에, 대중의 의식과 조직의 성장이라는 퇴적물을 남겼다.

대중 시위는 축제 같은 다중 운집과는 다르다. 시위는 대중의 정치적 의견이나 정서를 강하게 표현한다. 대규모 투쟁 참가하는 시위 참가자들이 그전에 하던 일상생활과는 아주 다른 경험이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참가자는 아주 많았고, 그 운동에 대한 동조자는 훨씬 더 많았다. 그랬기 때문에 그 운동은 참가자와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 모두에게 강력해 보였다. 그래서 지배계급의 다수도 박근혜를 지키려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대중의 의식과 조직이 성장했다. 2017년 대선에서 민주당만 득을 본 게 아니다. 정의당도 200만 표를 얻었다. 진보당은 강제해산 당하던 때 파손된 지역 조직들을 전국적으로 복구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도 급증했다.

비록 개혁주의적 의식과 조직의 성장이었지만,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진보다.

그 뒤 문재인 정부의 배신에 맞서는 대규모 운동이 벌어지지 않았다. 덕분에 사람들은 문재인에게 환멸을 느끼며 사기 저하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하며 탄식했다.

퇴진 운동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보다 더 좋은 정부를 원했다는 것이고,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었다.

문제는 노동운동의 개혁주의적 지도부들이 대중의 불만과 염원을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 정부를 (종종 비판적으로) 지지한 것이었다.(문재인 정부의 배신과 노동운동의 대응에 대해서는 6면에 실린 '정권이 바뀔들 민주당일 텐데 뭐가 달라지겠냐?'를 보시오.)

박근혜 퇴진 운동이 문재인 정부의 배신(이는 불가피한 필연이었다)과 환멸(그로 인한 우파 정부의 재등장)로만 귀결된 것은 불가피한 일이 아니었다.

박근혜 퇴진 운동은 올바르게 기억되고, 그로부터 미래의 투쟁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교훈을 이끌어 내야 하는 귀중한 운동이었다.

▶ 6면에서 이어짐

자들은 민주당과 차별화한다며 윤석열 퇴진 투쟁을 회피해 오류를 더 나쁘게 반복한다.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 윤석열에 맞선 투쟁도 주저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본주의 시스템 실패에서 비롯한 심각하고 복합적인 위기 때문에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더 소심해진 영향

도 있다.

그러나 정치 권력 문제를 회피하고서 효과적인 정치적 대안을 건설할 수는 없다.

지금의 답답한 정치 상황이 과거의 선택이 누적된 결과라면, 윤석열 퇴진 운동의 미래 그리고 윤석열 퇴진 후의 미래도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니다. 앞으로

퇴진 운동과 좌파가 할 정치적 실천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러려면 문재인 정부하에서의 경험에서 제대로 배워야 한다.

단호하게 윤석열 퇴진 운동을 지지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들은 노동계급의 고통을 해결할 사회경제적 요구(가령 부채 탕감, 금리 인하, 실질임금 방어,

공공요금 인상 반대 등)를 위해 싸우며 윤석열 반대 운동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

지배계급의 눈치를 보며 윤석열의 탄압과 마녀사냥에 제대로 된 저항도 못하는 민주당을 믿고 기대해선 곤란하다. 해방은 물론이지만 개혁도 누가 선사하는 게 아니다.

윤석열과 경찰, 이태원 참사

이 글은 11월 15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문이다.



영상 보기

우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지금 윤석열은 순방과 야당 공격으로 국면 전환을 노리고, 꼬리 자르기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뻔뻔스럽게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권위주의에서 비롯한 비극입니다. 윤석열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등 서민층에 전가하기 위해 취임 몇 개월도 채 안 돼 통제와 탄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탄압 자체가 본령인 국가 기관들에 직접 지시를 내렸는데, 특히 공안 대응과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 년 만에 국가보안법 탄압을 네 차례나 자행했습니다. 집시법 개악, 촉법소년 연령 하향, 온라인 상의 국가보안법이라 불리는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 등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총기 지급을 늘리도록 지시하고 예산을 배치했습니다.

모두 법·질서를 앞세워 민주적 권리들을 위축시키는 조처들입니다..

이런 우선순위에 따라 경찰 지휘부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10월 2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대정부 집회들이 끝난자 일제히 임무 해제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장은 캠핑장에서 놀다가 자고, 서울경찰청장은 집에 가서 잤습니다. 기동대들도 임무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도심에서 작전 태세를 유지한 경찰 조직은 마약수사팀밖에 없었습니다.

이날은 헬러원 축제 정점인 날이어서 경찰청은 서울의 각 경찰서 마약수사팀을 주로 이태원에 집중시키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전담팀도 이태원에 왔습니다. 경찰은 마약 시약 6천만 원어치도 들고 출동했습니다. 대대적인 현장 검거를 계획한 상황입니다.

오후 6시 40분부터 112 신고 전화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8시 40분에 마약 수사팀을 현장에 투입합니다.

어쩌면 더 많은 마약 사범 검거를 위해 정복 경찰이 눈에 안 띄는 게 좋다는



계산을 했던 듯도 합니다.

그러나 이날 마약 단속 실적은 제로였습니다. 아마 사람이 너무 많아 형사들도 이동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일 겁니다.

참사가 시작된 지 30분 뒤에야 비로소 경찰은 임무를 구조 지원으로 변경합니다.

당일 상황을 보면, 경찰이 집회 대응, 마약과의 전쟁, 대통령실 경비를 우선시해 안전 대책은 열외로 취급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우선순위

경찰은 왜 이런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였을까요?

바로 대통령의 공권력 사용 우선순위에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취임 전부터 범죄와의 전쟁을 강조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마약 범죄를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장 윤희근은 취임 첫 약속으로 사기 범죄와 함께 마약 범죄의 대대적 단속을 '국민체감약속 1~2호'라는 이름으로 내놓고 관련 수사 인력과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검찰법 시행령 개

윤석열의 우선순위가

이태원 참사를 낳았습니다.

윤석열과 이태원 참사 사이에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단지 상관관계가 아닙니다.

취임 직후 통제와 탄압 강화 시작

국가보안법 탄압, 집시법 개악 등 경찰에 총기 지급 확대 지시

이태원 헬러원 대책에 반영

당일 집회 대응 후 경찰 임무 해제 마약수사팀만이 작전 태세 유지

정을 통해 마약범죄 수사권을 되찾았습니다.

검찰총장은 공항·항만 등을 담당하는 지방검찰청에 마약수사팀을 만들고 국경 통제를 강조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빠질 수 없죠. 국정원은 대공신고 전화 111로 마약 신고를 받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5년간 약 2조 원어치 마약 범죄를 적발했다며 울분에 실적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이게도 참사 전 일주일 동안 윤석열 본인이 마약과의 전쟁을 집중 강조했습니다. 경찰과 내각에 직접 지시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1만 4000명을 동원하기로 합니다.

이태원 참사 사흘 전인 10월 26일 정부와 여당은 범정부적 역량을 동원해 1년간 마약특별수사를 벌이기로 결정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마약 수사 예산을 늘리겠다고 참사 열흘 뒤인 11월 8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과 그의 행정부, 집권당의 이런 우선순위에 따라 이태원 헬러원에 대한 정부 대책도 마약 수사에 강조점이 놓였습니다. 당일 참사 이전 이태원 현장에 있던 경찰은 117명이었고, 그중 최소 79명이 마약 수사 관련 요원들이었습니다.

총괄 안전 책임을 맡아야 할 서울시와 용산구청은 이런 정부 움직임을 보고 무책임하게 손을 뗀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우선순위는 바로 대통령 윤석열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제 생각에 좌파 다수가 이태원 참사 후 윤석열 퇴진 투쟁을 기피하는 것은 참사의 진정한 원인을 보지 못하고 지엽말단에 주목한 탓도 있지 않나 생각

됩니다. 특히, 윤석열과 참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지 못하는 듯합니다. 단지 상관관계가 아닙니다. 인과관계입니다.

좌파 다수의 관점은 일부 각료 등 실무자 책임론이나 또는 추상적인 국가 책임론, 막연한 시스템개선론 등에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간접적 책임만 있는 듯하니 '사과'를 하라는 입장입니다.

경찰의 성격과 기능

윤석열의 경찰 정책을 살펴보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범죄와의 전쟁, 경찰 통제 강화, 경찰 무장과 권한 강화가 그것입니다.

윤석열은 경찰에서 전임 대통령 문재인이 임명한 인사들부터 쫓아냈습니다. 문재인이 임명한 경찰 수뇌부를 모두 날리고, 경찰청장에 정보 경찰 출신 윤희근을, 행안부 경찰국장에 경찰 꼬나폴 출신으로 보안경찰 간부가 된 김순호를 임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후에 정부가 맨 먼저 꼬리 자르기 한 용산서장도 전임 대통령 문재인이 임명한 인물입니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한 것은 경찰을 관리·통제하는 통로를 늘린 것입니다.

한편, 윤석열은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당근책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통상 벌어진 범죄를 사후에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검찰과 달리, 경찰은 방대한 조직을 전국적으로 운영하면서, 치안·정보(사찰)·수사 기능을 모두 담당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기존 질서 수호를 위

해 두드러지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그 기능과 규모와 상명하복 위계가 군대에 비견할 만합니다.

지배계급에 대해 갖는 경찰의 이런 중요성 때문에 행정안전부 소속 일개 기관인데도 올해 경찰청 예산은 12조 3천억 원으로, 여부가 족부의 여덟 배가 넘습니다.

이런 특별한 조직이므로 정부는 경찰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려고 하고, 경찰도 거의 언제나 정부 핵심부에 충성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힘 있는 자들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노동자 등 서민층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이번 112 신고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112센터가 왜 그랬을까? 파출소는 왜 그랬을까? 등 지엽말단에 집착하면 혼란에 빠집니다. 경찰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경찰은 상명하복 조직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방향성, 강조점, 지시 등이 경찰 배치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용산경찰서에서 이태원 인파 밀집 대책 의견이 묵살된 이유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전의 이태원 축제 관리 경험에서 비롯한 의견이 나왔겠지만, 정부의 우선순위가 바뀐 데다 이제 용산서는 대통령실이 관할지에 있는 경찰서로서 서 전체의 강조점이 대통령실 경비로 바뀌었습니다. 청와대 시절, 종로경찰서가 집회·시위 통제에 이끌이 났듯이 말이지요.

그런 곳의 서장은 별 탈만 없다면 승진도 잘 됩니다. 그러니 용산서에서도 경찰 전체의 상명하복 관행 속에서 이태원 인파 밀집 대책이 쉽게 묵살된 거죠.

윤석열이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윤석열은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걸까요?

지배계급이 겪고 있는 경제·안보 등 복합적 위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이 위기가 한층 더 심각해지고 있죠. 특히 물가 급등과 급속한 금리 인상은 모두 노동자 등 서민층 사람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더욱이 금융 위기 가능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오른 거라고 거짓말하며 긴축 기조 위에서 금리 인상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강원도 레고랜드 사

태 이후 순식간에 시장에 자금 경색이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는 설상가상으로 세계 경제 위기, 미·중 갈등 격화가 초래한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결되기도 어렵고, 자본가들끼리도 서로 유리한 해법을 두고 쟁투를 벌입니다. 최근 한미 간 전기차 보조금 갈등도 그런 사례죠.

자본가들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위기의 고통을 합심해 노동계급에 전가하려고 합니다.

윤석열은 그런 임무를 본격화하려다가 공공요금 인상, 물가 급등 방지, 금리 인상 등만으로도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져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은 자신의 지지 기반에 충실하려 합니다. 자본가와 국가 관료, 각 기관 운영자 등 말입니다. 자본주의 하의 민주주의가 진짜로 민주적이지 않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죠.

대중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중의 삶을 공격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하에선 정치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정치·사회 불안정이 더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자들이 기존 질서의 유지를 위해 권위주의적 수단들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한국뿐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등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수 정부들이 갈수록 권위주의적이 돼 가는 이런 맥락 속에서 그런 흐름을 정당화하는 핑계 하나가 바로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은 ‘시스템 실패’의 원인을 가리고 호도하는 사기극입니다.

보수 정부들은 범죄 위험을 부각해 사람들 사이에서 개방, 연대, 관용보다는 위축, 불신, 무관용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개인들이 국가에 의존하고, 법·질서를 내세운 공권력, 특히 경찰력 강화가 정당화되며, 기존 시스템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고립·위축시키기 쉽기 때문이죠.

권위주의적 수단들을 사용하는 데에 경찰은 안성맞춤이고, 그런 공작들을 포장해 주는 데는 범죄와의 전쟁이 안성맞춤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의 본질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자 합니다. 마약 전쟁은 모든 보수 정부가 법질서 수호를 앞세워 권위주의를 강화할 때 아주 유용한 아이

윤석열의 우선순위 헬라윈 안전 대책 외면으로 이어져

참사 당일 마약 단속에 집중한 경찰
117명 중 79명이 마약 수사 요원



‘범죄와의 전쟁’이 노리는 효과



시스템 실패 원인 은폐
범죄 위험 부각
불신·위축 부추겨

경찰력 강화 정당화

‘마약과의 전쟁’으로 쿠데타 정당화



박정희

“마약은 국가 재건 방해물”



전두환

“마약 사범은 사회악”

템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공포와 혐오를 자아내고 성소수자, 이민자 등 특정 그룹의 소수자들을 표적이나 속죄양 삼기도 딱 좋습니다.

또한 마약 수사는 특성상 도·감청, 쫓나팔 활용, 위장 잠입 공작원 침투시키기 등公安 수사와 똑같은 수사 기법들이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물론 합정 수사는 조금 다른 수법입니다.

마약 수사는 경찰, 해경, 검찰, 국가정보원 등은 물론이고 식약처, 관세청, 출입국관리, 외교부, 해당 지역 지방정부 등 다양한 기관들이 범정부적 협력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마약 수사는 국경 통제를 수반합니다. 수년 전 트럼프는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운다면서 멕시코 정부에 합동 ‘마약과의 전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마약과의 전쟁은 군사 독재자들이 자신들의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데 쓰였습니다.

박정희는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마약 범죄를 “국가경제를 쪼먹고 국가 재건 과정의 장애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내란선동죄 등과 함께 국가혁명방해죄로 규정하고 군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전두환도 이 점에서 박정희와 판박이었습니다. 1980년 5.17 쿠데타 후 마약 범죄 등을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대대적인 검거 선풍이 불었고, 그 일부를 악명 높은 삼청교육대로 보냈습니다.

요즘 50년에 걸친 미국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 시작은 1971년 공화당 닉슨 정부입니다. 닉슨은 마약단속국

▶ 10면으로 이어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헤르손을 잃은 러시아,
그러나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장악하고 있던 유일한 주도(州都)인 헤르손에서 철수했다. 푸틴 정권은 또 한 번 군사적 후퇴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내의 전황을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몇몇 '전문가'들은 헤르손 철수가 전술적 기동이라거나, 심지어 러시아 정부와 미국 정부가 비밀리에 맺은 협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수렁에 빠진 러시아군을 제치고 크림반도로 진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찌 됐든 꽤 타당해 보이는 전망은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 협상 가능성이 더 자주 거론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와 러시아 정부 모두 협상에는 진정관심이 없어 보인다.

서방의 막대한 무기 지원과 그 덕분에 거둔 승리에 고무된 우크라이나 정부는 크림반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러시아가 철군하는 것을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푸틴에 관해서는 영국의 군사 역사학자 로런스 프리드먼의 설명이 정확해 보인다. "현재 전황을 볼 때 푸틴의 현재 우선순위는 승리에 있지 않다. 물론 승리를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우선순위는 참패를 면하는 것이다."

"푸틴은 이 전쟁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있기도 하다. 이 전쟁은 푸틴의 전쟁

이고, 푸틴은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숨기지 않았다."

"실패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푸틴이 오판을 했다고 비칠 것이고 푸틴의 지위는 취약해질 것이다. 거칠게 말해, 푸틴이 권좌에 남아 있으려면 러시아는 계속 전장에 있어야 한다."

혹독한 겨울이 오면서 전투는 더더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인들이 정말로 크림반도 탈환에 도전한다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비친 푸틴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려 할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 서방의 대응은 확전의 악순환을 일으켜 제3차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푸틴은 이 전쟁을 "서방 전체"에 맞선 투쟁으로 묘사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전쟁은 제국주의간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미국과 서방 강대국들은 우크라이나를 대리자로 앞세워 자신보다 약하지만 위험한 경쟁자인 러시아를 패배시키려 한다.

“세계 재분할을 둘러싼 투쟁”

이 전쟁 무대의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발전은 미국의 세계 패권에 더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일단의 이탈리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최근 펴낸 책에서 지적하듯이, 우크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라이나 전쟁은 "세계 시장, 세계 정치, 세계 문화에서 서방의 패권이 위기에 빠진 가운데 세계 재분할을 둘러싼 투쟁이 다시 시작됐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사건이다.

여기서 비롯한 투쟁이 11월 15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지배하고 있다.

이 회의는 선진국들과 주요 신흥국들이 만나는 주요한 장이다.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적했듯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여섯 나라 안에 드는 중국과 인도는 푸틴을 규탄하지 않았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 공화국·튀르키예[옛 이름 터키] 등 다른 G20 회원국들은 침공을 자행한 러시아를 제재하라는 서방의 요구를 거절했다."

미국 외교협회의 찰스 쿵찬은 이렇게 지적했다.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군사적 경쟁이 벌어지는 국제 환경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 경쟁은 이제 중국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면서 G20이 협력 기구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입하고 유럽연합의 제재가 낳은 무역 공백을 메워 주는 식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러시아 정부에 백지수표를 준 것은 아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푸틴은 2월에 중국 주식 시장 붕괴를 만났을 때 침공에 관해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11월 4일 시진핑은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와 함께 핵무기 사용과 사용 위협을 규탄했다.

상황은 여전히 매우 위험하다.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인 마크 밀리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10만 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냈다.

여기에 더해, 민간인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고, 전쟁을 수행하는 두 정부 모두 반대자를 탄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충돌은 핵 재앙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 전쟁 물이에 박차를 가하는 우리의 지배자들을 저지할 대중 운동이 절실하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31호 / 번역 이원웅

▶ 9면에서 이어짐

DEA를 신설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흑인 평등권 운동, 베트남전 반대 운동, 멕시코 불법이주민 등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마약과의 전쟁은 단지 혼자 마약을 했을 뿐인 청년들, 특히 흑인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범죄 집단화하고 그 수렁에 가두는 효과를 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을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재소자를 수감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은 제국주의 정책에도 이용됐습니다.

이런 선례들을 봐도, 윤석열의 경찰력 강화와 마약과의 전쟁은 정의나 사회 안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마르크스가 말한 소외 때문에

마약 사용을 줄이지 못합니다.

마약과의 전쟁은 그저 위기 탈출용, 권위주의적 공격의 정당화용 작전일 뿐입니다.

윤석열 퇴진 투쟁에
동참하자

참사 이후 윤석열은 참사 원인이었던 정부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서 민간 사찰 보고서를 만들고, 유언비어 단속한다더니 토끼머리띠, 각시탈 운운하며 유언비어에 맞춰 속죄양 찾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그 주변 좌파들이 윤석열 퇴진 구호를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퇴진 집회와 경쟁하는 집회를 공정한 바로 다음 날 정부는 민주당 공격, 국가보안법 수사, 〈노동자 연대〉 신문 판매 사찰 등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이태원 참사는 우연이 아니며 윤석열 정부하에서 다양한 형태로 다시 반복될 비극들의 예고편입니다.

이런 정부에 미래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

흑자는 정권 교체보다 체제 교체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추상적으로만 맞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체제 수호자는 누구인가요? 바로 몽둥이를 휘두를 준비 중인 윤석열 정부입니다.

체제를 바꾸려면 정치 권력 문제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현실 도피, 현실을

바꾸려는 실천에서 도피하면서 말로 좌파연하는 수동적 급진주의는 세계를 조금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윤석열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면, 또는 윤석열에게 권력의 운전대를 빼앗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많은 위험과 보복, 반격에 직면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산업재해, 공공서비스 후퇴, 복지와 재난 대응 예산 삭감, 임금 억제와 구조조정 등 생존권 위기, 기후 위기 심화, 군국주의 행보로 안보 위기 고조 등 우리의 삶은 더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에 동참합시다.

김문성

윤석열 정부의 대장동 수사

이재명 이미지 먹칠해
반윤석열 정서 사기 저하시키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벌이는 대장동 수사는 개발 비리 의혹의 총체적 실체를 규명하는 것보다 이재명의 연루 여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부패 척결과 정의 구현은 그저 핑계인 것이다.

애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떠올랐다.

성남시장을 8년간 지낸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을 개발 이익을 대규모로 환수한 치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대장동 개발의 투기 세력이 성남시보다 더 높은 수익을 챙겨갔다. 성남시의 환수총액은 5503억 원이다. 하지만 수익 배당금만 보면 사업 지분이 50퍼센트인 성남시가 1800억 원을 받은 반면, 7퍼센트인 투기 조직 일당이 4040억 원을 챙겼다. 그들은 분양 사업권도 받아 내어 분양 이익도 4000억 원가량 얻은 걸로 추정된다.

대선 경쟁자들이 이런 결과를 문제 삼아 이재명의 치적론을 공격한 것이다.

현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이 추진하려던 공영 개발을 반대했다. 그러자 이재명은 민관 합동 개발을 택했다. 개발 이익 배분에서 성남시가 우선권을 갖지만 그다음 단계에서 투기 조직 일당도 능력껏 이익을 얻을 기회를 주는 절충적 실용주의 정책이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투기 세력이 대박을 친 것이다.

여전히 실체는 오리무중

대장동 대박을 위해 김만배, 정영학, 남욱 등은 개발 전부터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들은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 천하동인 1~7호(일종의 사모펀드)를 만들었다. 실무자이자 투자자로 개발 계획에 참여했다. 성남시 쪽에선 유동규와 정민용이 활약했다.

김만배는 화천대유 고문에 전 대법관과 국민의힘 전직 의원 등을 영입했다. 이른바 “50억 클럽”도 관리했다. 이 중 박상도(박근혜 정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냄), 박영수 특검(박근혜·최순실 수사)의 자녀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다. 퇴직금 50억 원 등으로 특혜를 받았다.

이들에게 초기 사업 자금을 댄 것은 하나은행, SK 회장 최태원의 동생 최기원,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과



권위주의적 야당 탄압을 비판하는 것은 단순한 이재명 편들기가 아니다. 현 단계에서 진실을 말하고 윤석열 퇴진운동을 방어하는 것이다

연루된 조우형 등이다. 이들은 모두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사후 수익 배분 자체가 대가성일 확률이 높고, 연루된 인물이 고위 법조인, 정치인, 언론계 사장, 재계 거물 등이다. 고위층 네트워크와 결합된 비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사건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데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 중 박상도만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는 수사도 받지 않았다.

조우형은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와 연관된 돈을 대장동 초기 자금으로 제공했는데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10년 전 대대적인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수사 때, 조우형의 조사를 맡은 검사가 윤석열이었고 변호사가 박영수였다. 대장동 일당의 대화(“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이 조우형을 소환했을 때 박영수는 조우형에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한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는 천하동인 1호뎀 수익의 상당 부분이 “그분” 것이라고 했다. 그 때문에 불거진 진짜 주인 의혹도 미궁이다.

“그분”에 대한 다양한 설이 나왔었다. 김만배가 다니던 <머니투데이> 회장 홍선근(50억 클럽 명단), 초기 자금을 대여한 SK 최기원, 조대연 대법관, 이재명 등등. 최근 <뉴스타파>가 공개한 정영학 녹취록에는 유동규 것이라

는 대화도 나온다.

검찰은 이런 여러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그런 채로 천하동인 1호가 유동규·김용·정진상 3인의 것이라는 확증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미지 먹칠

김만배를 비롯해 주요 인물이 모두 구속돼 있다.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유동규만 최근 석방됐다. 검찰은 유동규 진술에 기초해 이재명 측근인 김용을 구속했다. 또 다른 측근 정진상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런데 검찰발 보도와 검찰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종합하면, 김용과 정진상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구속 영장은 구체적인 물증을 담고 있지 않다. 검찰이 유동규 진술에 근거해 사건을 재구성한 스토리를 제시하고, 이것을 입증할 테니 압수수색이나 구속 수사를 허가해 달라는 식이다.

민주당 압수수색을 할 때만 해도 대선 자금 혐의라더니 별 대단한 것도 나오지 않은 채, 이젠 성남시장 선거 자금으로 초점이 바뀌어 있다.

또한 검찰은 김용을 기소할 때 이재명도 공동 피의자로 기소할 것이라고 흘렸다. 그러나 막상 정식 기소장에서는 김용과 이재명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라고만 서술했다.

최순실을 기소할 때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적 공동체”라고 했던 것을 연상시키려 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공동체”는 최순실이 재벌들에게서 받은 뇌물이 박근혜가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으로, 증거도 있는 실체다. “정치적 공동체”는 훨씬 두루뭉술한 규정일 뿐이다.

물론 정확한 진실은 아직 모른다. 문제는 검찰이 현 단계에서 증거가 없어 이재명에게 구체적인 혐의조차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요란한 압수수색 등으로 연기를 피우며 이재명의 부패 이미지를 고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개혁 염원 대중 상당수가 적극적인 지지 못해서든 민주당 진보파인 이재명에게 투표했다. 이를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도 별 수 없는 구린 정치인이라는 울가미를 씌우는 목적은 분명하다.

현 정부를 비판하고 반대해 봐야 너희에게 더 나은 대안이 있느냐는 반문인 것이다. 윤석열에게 반감을 키워 가는 개혁 염원 대중에게 회의감과 대안 부재감을 주고, 윤석열 퇴진 운동을 단순한 친이재명 집회로 몰아가고립·약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이태원 참사 항의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 등 개혁에서도 주저하는 것은 윤석열에게 이롭다.

대장동 비리 수사를 빙자한 윤석열 정부의 제1 야당 탄압에 비판하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비판적 방어를 포함하지만, 이는 단순한 편들기는 아니다. 현 단계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윤석열 퇴진 운동을 방어하는 것이다.

김문성

마약과의 전쟁 — 고통 전가 위한 거짓 명분

장호중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전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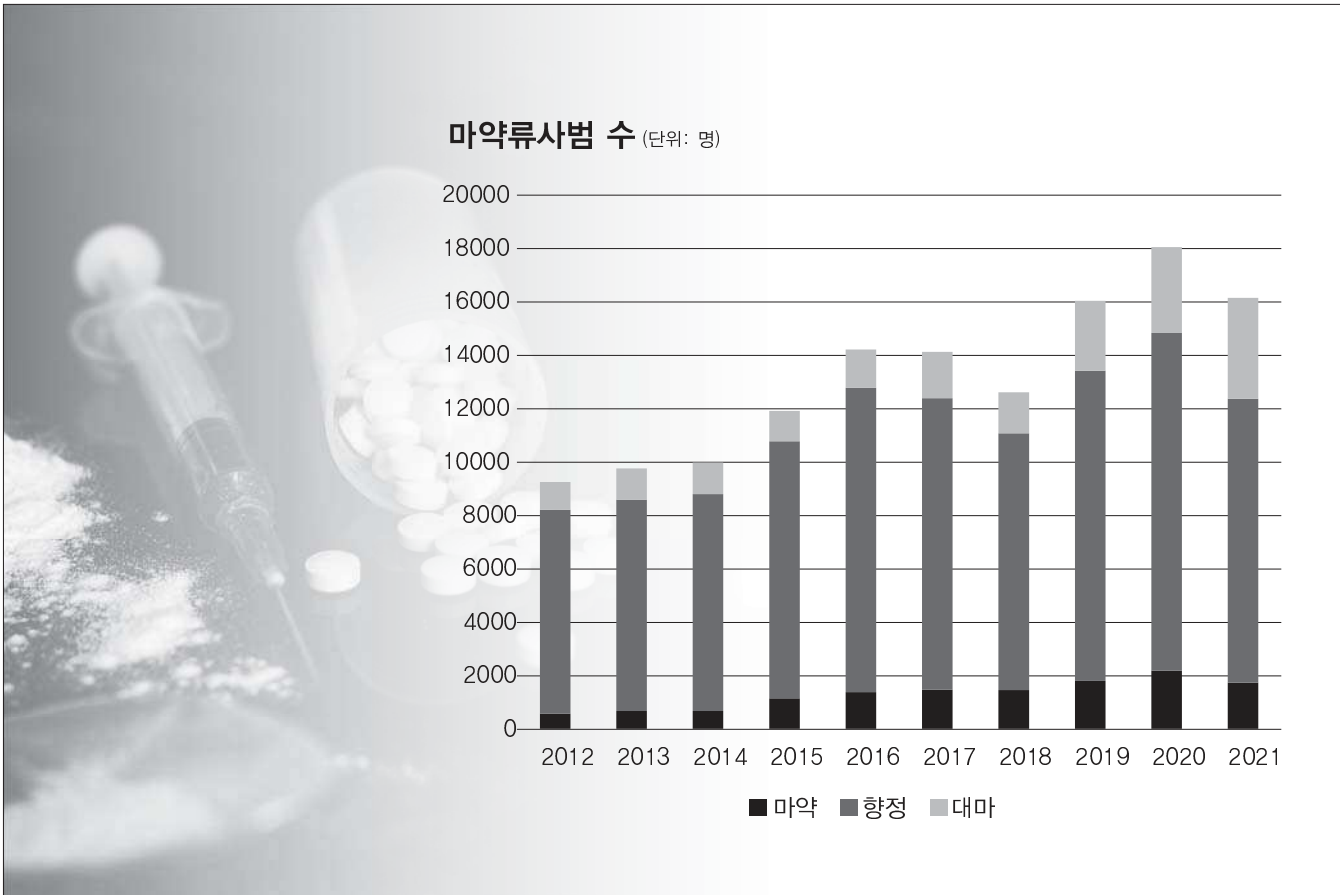
그러나 1971년 미국 대통령 닉슨이 처음 이 표현을 쓴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이 ‘전쟁’은 여러 나라에서 저항 운동을 억누르는 명분으로 사용됐지만 엄청난 희생을 낳았을 뿐 정작 마약 공급과 수요 어느 한쪽도 줄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적잖은 사람들이 그 진정한 동기와 효과를 의심한다.

마약류 범죄가 늘고 있다는 발표와 보도는 윤석열 정부 전에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2020년 부산에서 대마초를 피운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여러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정말로 마약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얼마나 늘어났을까?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줄여야 하지 않을까?

검찰의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이하 백서)를 보면 국내 마약류 사범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그림 1) 전문가들은 적발되지 않은 사례(암수율)를 고려하면 실제 사용자 수는 적어도 20만~30만 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한다.



마약 공급이나 유통이 아닌 단순 사용을 범죄화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는 마약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없다

정부는 마약류를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향정)’, ‘대마’로 구분하는데 각각의 약물의 특성은 매우 이질적이다.

10년 전보다 전체 마약류 사범이 6898명 늘었다. 가장 큰 비중(39.6퍼

센트)을 차지하는 것은 대마 관련 마약류 사범이다.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퍼센트에서 23퍼센트로 크게 늘었다.

그런데 대마의 경우 마약으로 분류해 사용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지나

치게 많은 양을 투여할 경우 환각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중독성이나 독성 면에서 술이나 담배보다 덜하다. 네덜란드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사용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 이유다.

그래서 최근에는 검찰·경찰도 대

처벌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다

마약류 사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향정은 2012년 7631명에서 2021년 1만 631명으로 39퍼센트 증가했다. 최근 적발된 밀매 사례를 보면 그 양이 크게 늘어났고 시중 가격도 내려간 것으로 보아 공급과 소비 모두 늘어난 듯하다.

이 약 중에 일부는(필로폰, GHB 등) 성범죄 등에 사용되기도 하고 특히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에도 무척 해롭다. 따라서 이런 약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마약 공급이나 유통이 아닌 단순 사용을 범죄화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는 마약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없다.

미국의 유명한 비영리기구 퓨(Pew)

자선기금이 2018년 3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 내 마약 범죄로 수감된 사람이 30만 명에 이른다. 이는 1980년 2만 5000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고 형량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 주를 비교한 결과 “마약 범죄 수감률과 마약 사용률, 마약으로 인한 사망, 체포율 사이에는 아무런 통계적 연관성이 없었다.”

마약 사용의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다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본주의하에서 일상 생활의 권태와 스트레스, 우울감을 잊으려고 마약에 손을 댈다. 또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 2021년 국내 전체 향정 사범의

40퍼센트는 무직이었다.

합법적(의료용) 향정 사용 통계를 보면 2012~2021년 사이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진단받은 환자의 수는 114만 명에서 175만 명으로 53퍼센트나 늘었다. ‘마약류 사범’의 100배가 넘는 것이다. 이들이 처방받은 약도 연간 6억 5712만 개에서 12억 8270만 개로 갑절로 늘었다. 마약 사범 통계와 마찬가지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10~20대 비중이 크게 늘었다.(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 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이런 통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원인 진단은 대동소이하다. 장기화된 경제 침체와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평등, 코

로나 팬데믹과 전쟁, 기후 위기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특히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많은 청년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마약류 사용이 늘어나는 현상도 그 일부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치료다. 심지어 국가 기구들도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

“마약류 사범 5명 중 1명은 중독이라는 ‘임상적 증상’으로 마약 범죄에 가담… 치료적 개입이 재범 방지의 주요 전략이 될 수 있음.”(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21)

▶ 13면 하단으로 이어짐

마약과 불평등, 자본주의

마약 중독은 치료할 수 있다. 그리고 치료에는 마약이 사용된다. 역설적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투약을 중단할 때 생기는 금단 증상 때문에 갑자기 투약을 중단해선 실패하기 십상이다. 그보다는 몸에 덜 해로운 마약을 사용해 서서히 그 양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치료하는 것이 표준 요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마약 사용을 범죄화하는 분위기가 강할수록 이런 치료법도 금기시된다. 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까다로워지고, 의료진조차 자칫 ‘공범’ 취급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면서 치료 지원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중독자는 몇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의 ‘치료보호 지정병원’을 찾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면 본인이 매달 120만~150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그 뒤로도 1년 이상 2~4주에 한 번씩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는 데 회당 10여만 원이 든다. 그런데 2021년 치료보호 인원 가운데 검찰이 치료를 의뢰한 경우는 전체 이용자 280명 가운데 1명뿐이다.

올해 예산도 4억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지자체 예산을 더해도 8억 2000만 원이 전부다. 환자 164명이 한달 입원하면 한 해 예산이 소진되는 셈이다.〈머니투데이〉, 2022년 10월 1일치)

그래서 실제로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약류 사용자도 벗어나기가 어렵다.

반면, 부유층과 권력자들의 마약류 사용은 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설사 중독이 되더라도 언제든 치료받을 수 있고 직장

에 복귀하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이 충분한 요양을 할 수 있다.

마약과의 전쟁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잘 보여 준다. 마약류 중독의 책임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지우고, 알량한 재정 지출이 아까워 도덕적 비난에만 열을 올린다. 사람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

마약을 범죄화하면서 같은 성본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우울증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은 장려된다. 이윤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일상의 고통과 무료함에 서 벗어나고자 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몸부림은 비난과 처벌 대상이 되고 진정한 범죄자들의 책임은 면제해 준다.

그리고 마약과의 전쟁은 사람들이 마약류를 사용하게 되는 근본 원인, 즉 소외와 차별, 불평등과 지루함을 양산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라 그 피해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는 시도다.

무엇보다 체제의 지배자들은 마약과

의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지배와 어젠

다를 강화하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도 심화하는 경제·안보

위기 하에서 대중의 불만과 저항을 단

속하고 위기의 고통을 노동계급에 전

가하기 위함이다.(관련기사 8~9면)

마약과의 전쟁에 반대해야 한다.



전국 지정병원 21곳에서 치료비 지원을 받은 환자는 10년간 2000여 명뿐, 두 곳을 제외하곤 사실상 중독 치료를 중단한 상태다

마초보다는 필로폰이나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을 크게 사건화하곤 한다.

‘마약’ 사범의 경우 “대부분은 농촌, 산간 및 도서지역 등의 고령층 주민들이 관상용, 가정상비약 및 가족의 질병 치료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귀비를 밀경작한 것을 단속한 결과”다.(백서)이 비중도 전체 마약류 사범의 11퍼센트나 차지하고 지난 10년 동안 늘어난 전체 마약류 사범의 16.9퍼센트를 차지한다.

이처럼 마약 범죄가 크게 늘어 사회

가 위험해졌다는 정부의 주장은 과장된 면이 있다.

정부는 마약류를 사용한 뒤 저지르는 극히 일부의 강력 범죄 사례를 부각하며 공포를 부추긴다.

그러나 마약 사용이 강력 범죄로 이어진다는 주장의 근거는 빈약하다. 백서를 보면 “마약류 투약 환각 상태 2차 강력 범죄”는 살인, 강도, 인질극 등을 모두 더해 최근 5년간 매년 10건 안팎으로, 사용자 수를 20만 명이라고 가정해도 ‘전체 인구 대비 강력 범죄율’보다 한참 낮다.

▶ 12면 하단에서 이어짐

그런데 이들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고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이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효과만 놓고, 그럴수록 직장을 구하거나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기도 어려워진다. 그러면 약물에 대한 의존은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생긴다.

규제 당국도 경험적으로 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평소 수사 관행은 수사 실적에 맞춰져 있을 뿐이다. 이들도 실제 마약 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특히 향정 관련 범죄의 경우 수사는 압도적으로 내부 제보에 의존하는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진정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마약 공급책들에게는 관

대한 처분을 내린다. 수십 년 동안 마약류에 중독됐다가 어렵게 벗어나 지금은 민간 재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임상현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장은 이렇게 말한다.

“제가 유통업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수사받을 때 제가 아는 정보를 검찰에 넘겨 줘요. 전부 알려 주진 않습니다. 제가 유통업자 5명을 알고 있으면 2명의 정보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수사에 협조를 하다 보면 형량이 줄어들어요. … 그렇게 형량이 줄어들고 투옥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되면 또 다시 유통업을 합니다. 악순환의 반복인 것이죠.”(〈투데이신문〉, 2021년 3월 22일치)

‘마약과의 전쟁’의 또 다른 효과 — 이주민 통제, 인터넷 감시 강화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으로 얻고자 하는 효과가 더 있다.

하나는 이주민에 대한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검찰은 마약과의 전쟁의 한 축을 “국경단계에서의 밀반입 시도 단속”(검찰)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도 “조직적인 밀반입”과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 행위”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는 지난 5년 사이 마약류 밀반입 건수가 가장 많았던 태국·중국·베트남 출신 이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들은 국내 이주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최근 태국 출신 이

주자들이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악용해 대거 밀입국했다며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검찰 등이 강조하는 또 다른 국내의 유통 경로는 다크웹, SNS 등 인터넷이다. 경찰은 10~20대의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의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정부의 인터넷 감시는 정적이나 노동운동, 좌파에 대한 사찰 수단으로도 이용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이런 조처에 일관되게 반대해야 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workersolidarity.org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wspaper_org
@wspaper
노동자연대TV



wspaper.org/online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채널 바로 가기

- 주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 주요 시사 이슈를 10분 안에 명쾌하게! 시사/이슈 토크
- 135개 다양한 쟁점을 다룬 맑시즘 강연 음원
- 현장감 넘치는 노동자 투쟁 취재 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기후 정의,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 탈성장과 핵발전 등 총 10회에 걸쳐
기후 위기 문제와 운동 내 쟁점을 다룹니다.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엔코리아 현재호: 서울대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6 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9 772005 1821003

47

지도부 성향을 이유로 퇴진 운동과 거리 두기?

강동훈

좌파 일각에서는 윤석열 퇴진을 지지함에도, 현재 벌어지는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꺼리는 경향도 있다.

현 윤석열 퇴진 집회가 “소부르주아 시민운동 진영”이 주도하고 있어서 “지난 ‘박근혜 탄핵정국’처럼 그저 민주당에게 횡재를 안길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자·민중이 퇴진 투쟁을 주도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는다.

노동운동이나 좌파 단체가 주도하는 별개의 퇴진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나 좌파 단체들이 현재의 윤석열 퇴진 운동을 지지하며 자기 나름의 사회경제적 요구들도 제기한다면, 이는 퇴진 운동을 키우는 일일 뿐 아니라, 기존 퇴진 집회 참가자들에게도 좌파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노동운동과 좌파 단체 대부분은 윤석열 퇴진 운동에 의식적으로 불참하고, 그저 대통령 사과와 총리·장관 사퇴, 책임자 처벌 등과 이를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데 머물고 있다.

11월 12일(토) 전국노동자대회 직후 민주노총은 전국민중행동 등과 함께 별도의 시민 추모 촛불 집회를 열었다.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와 사실상 경쟁하는 집회를 개최해 윤석열 퇴진 운동과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이 투쟁을 주도할 때까지 기존의 퇴진 운동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그저 현재의 퇴진 운동에 불참한다는 것밖에 안 된다.

이는 결국 윤석열 퇴진 요구를 선전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선전이 완전히 무의미한 일은 아니겠지만, 이미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중 행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좌파의 과제를 선전에 국한하는 것은 영향력을 제한할 뿐인 비효과적 방침이다.

물론 지금 노동자들이 퇴진 투쟁을 지지하지 않는 소속 노조 집행부나 정당 지도부에 불만을

제기하며 퇴진 운동을 지지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지도부의 입장을 바꾸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노동자들의 의식(핵심적인 요소는 의지와 의욕이다)은 윤석열 퇴진 구호에 호의를 보이면서도, 퇴진 운동 건설을 거부하는 지도부를 비판하고 압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퇴진 운동을 노동계급 지향 좌파가 주도하는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금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현재로서는 현재의 퇴진 운동을 대규모로 성장시키고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하게 해 그 운동이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는 조직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처우 개선 투쟁에 나설 자신감을 키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윤석열 퇴진 운동의 지도부가 친민주당적이고 덜 급진적이라는 약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령 김건희 특검 같은 전혀 부차적인 문제가 집회의 2대 요구가 돼 있는 것은 이 운동이 전면적인 반정부 투쟁으로 발전하고 급진화되는 것을 제약하고 있다.

그러나 주말마다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근처에는, 좌파 상당수가 인정하는 것처럼 “격화되는 경제위기와 민중들의 생존의 위기가 존재한다.”

이는 이 운동이 더 급진적이고 더 큰 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이런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려면 노동계급 지향 좌파들이 운동을 지지하고 참여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뿐 아니라 생계비 위기, 신자유주의 정책 같은 윤석열 정부의 폐단에 반대하는 요구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대규모 운동이 벌어지는데도 좌파들이 자신의 임무를 선전에 국한한다면 오히려 정치적 주도권을 중간계급 지향 친민주당 좌파에 내주고, 노동자들의 의식도 그 수준에 머물게 할 뿐이다.

‘우리도 윤석열 퇴진을 요구했다’는 자기만족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사태를 바꾸려는 개입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퇴진 운동을 더 급진적이고 전면적인 반정부 투쟁으로 발전시키려면 좌파들이 운동에 참여해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민지 기자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결합과 그 시너지 효과 — 룩셈부르크의 통찰

이원웅

세계 자본주의가 크나큰 위기에 빠진 가운데, 그 위기의 한 표현으로 한국 윤석열 정부의 정치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과제를 본격 추진하려다 지지율이 급락했다. 더구나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대중의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다.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만만찮은 규모의 시위가 매주 열리고 있다.

물론 아직 윤석열을 퇴진시킬 만큼 투쟁의 동력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투쟁이 더 커지면 중요한 돌파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

폴란드 출신의 독일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1871~1919)는 이처럼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통찰을 준다.

룩셈부르크는 그런 통찰을 1906년에 쓴 소책자 《대중파업, 정당, 노동조합》(이하 《대중파업》)에서 발전시켰다.

그 소책자는 1905년 러시아 혁명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다.

1905년 혁명 동안 차르 독재하의 러시아에서는 1월과 10월, 11월에 대규모 파업 물결이 세 번 일어났다. 첫 파업 물결은 매우 사소한 사건으로 촉발됐다. 당시 수도 페테르부르크의 푸틸로프 대공장에서 노동자 4명이 절반쯤 자주적인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다(그 노조는 경찰 첩자가 설립한 것이었는데도). 이에 노동자들은 일제히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노동조합 인정, 정치 개혁 등을 차르에게 탄원하며 행진했다. 그러나 차르는 여기에 경찰 발포로 응답했다. 노동자 4000여 명이 사망했다.

그러자 러시아 제국 전역으로 파업이 확산됐다. 생활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 요구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적 요구들을 불렀다. 경제투쟁이 정치투쟁을 낳았는데, 그 역도 마찬가지였다.

8월에 차르는 양보 조처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가 인정한 절반의 ‘의회’ ‘두마’는 입법 권한도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했다. 두마를 선출하는 투표권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변화 열망을 배신당한 노동자들은 10월에 다시 파업 물



로자 룩셈부르크는 대중파업을 통해 노동계급이 스스로를 변화시켜 사회를 변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을 일으켰다.

결국 10월 17일 차르는 헌법을 도입하고 개인의 시민적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포고령을 내렸다. 이 어정쩡한 양보는 다시 노동자들의 투지를 자극해 11월에 경제적 요구를 중심으로 한 파업 물결을 낳았다.

룩셈부르크는 이런 러시아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적용하려 했다.

일반화

룩셈부르크는 노동자들의 경제투쟁(임금 인상 등을 위해 노동자들이 개별 일터에서 벌이는 투쟁)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정치투쟁(정치 권력을 둘러싼 투쟁으로, 궁극으로는 국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한다는 점을 포착했다.

노동자들은 경제적 요구를 위해 싸우면서 조직을 건설하고 집단적 힘을 자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시야를 넓힐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 요구 자체가 정치적 성격을 띠 수도 있고, 경제적 요구로 시작된 투쟁이 전 계급적 지지와 공감을 얻어 정치적 초점이 되기도 한다.

룩셈부르크는 또한 정치투쟁이 경제투쟁을 자극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치투쟁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된 노동자들이 그 자신감을 갖고 일터로 돌아가 그동안 사용자에게 겪은 수모를 더는 감내하기를 거부하고, 임금 등 노동조건을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룩셈부르크는 이렇게 썼다. “정치 행동의 고양 뒤에는 언제나 기름진 퇴적물이 남아 수많은 경제투쟁의 싹을 틔

운다. 그 역도 마찬가지다. 자본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경제투쟁은 정치투쟁의 휴지기마다 노동자들이 버티게 해 준다. 경제투쟁은 정치투쟁에 항상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노동계급 역량의 마르지 않는 저수지다.”

룩셈부르크가 이런 동역학에 주목한 것은 당시 독일 노동자 운동 내 논쟁 때문이기도 했다.

당시 독일에서는 물가 인상과 생계비 위기로 파업이 급증하고 있었다.

독일의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사회민주당 지도자들은 여기에 두려움을 가졌다. 노동조합 지도층은 대규모 파업을 파업 기금을 바닥내고, 선거를 통한 점진적 사회 개혁 프로젝트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모험으로 여겼다.

그래서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대중파업이 지배계급의 탄압을 부를 것이라며, 역량이 충분히 갖춰졌다는 판단을 자신들이 내리기 전까지는 노동자들이 선불리 대중파업에 나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꾸준히 노동조합원을 늘리고 사회민주당의 세와 의석을 늘려서 그런 역량이 갖춰질 쯤이면, 이미 사회민주당이 우세해져서 그런 모험을 벌일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룩셈부르크는 《대중파업론》에서 이런 단선적인 역사관을 비판했다. 그리고 노동계급의 의식과 투쟁 역량은 노동계급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함을 보이려 했다.

또, 룩셈부르크는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결합(때로 통일)을 통해 노동계급이 혁명으로 스스로 나아갈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다만, 룩셈부르크는 그 과정을 다소 숙명론적으로 묘사하는 약점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노동조합 관료층(지도자들에 기반을 둔 개혁주의의 영향력을 과소 평가했다.

또, 대중파업이 자동으로 기존 국가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수렴되는 것도 아니었다. 1905년 러시아 혁명은 결국 차르의 강력한 탄압에 직면해 패배했다. 1917년에 다시 일어난 혁명은 1905년의 교훈을 간직하고 의식적으로 적용하려 애쓴 혁명적 조직(볼셰비키당)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시너지에 관한 룩셈부르크의 통찰은 탁월한 것이다. 룩셈부르크가 묘사한 동역학은 이후 여러 거대한 투쟁에서 되풀이됐다.

예컨대, 이런 동학은 1987년 여름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났다. 6월항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면서 자신감을 얻은 노동자들은 그 자신감으로 7~9월에 자신들의 일터에서 경제투쟁을 벌였다. 이런 투쟁들은 6월 항쟁의 성과를 굳히는 효과를 냈다.

룩셈부르크가 말한 시너지는 혁명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에서도 작은 규모로 나타나기도 한다.

1996년 연말과 1997년 연시의 노동법 파업은 룩셈부르크가 말한 아래로부터의 대중파업은 아니었지만,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소명한 ‘관료적 대중파업’이었다. 그 파업에 고무받아 봄에 청년·대학생들의 김영삼 정권 퇴진 투쟁이 일어났고, 늦가을에는 IMF(를 불러들인) 위기에 맞서 노동자저항이 일어났다.

이런 경제투쟁/정치투쟁 상호작용 덕분에 정치 지형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생겨 일당 국가가 와해되고 김대중이 집권할 수 있었다.

현재 윤석열에 맞선 정치투쟁은 아직 그 규모가 충분히 크지는 않다. 그러나 투쟁이 더 커지면 참가자들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자신감이 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사용자들을 상대로 경제적 투쟁을 벌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투쟁은 다시 윤석열에 맞선 투쟁을 더욱 고무할 수 있다.

윤석열 퇴진 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미일 정상회담 북핵 '위협' 빌미로 미국의 핵우산 확대하기

김영익

11월 13일 대통령 윤석열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이 회담에서 세 정상들은 경제, 안보, 기술 등 다방면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세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했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하며,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도 합의했다.

대만 문제, 공급망 등의 경제 안보 등은 모두 미·중 갈등의 핵심 쟁점이다.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은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강조해 온 것이며, "경제적 강압"도 미국 정치인들이 중국을 비난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다.

또 이 회담에서 윤석열 정부는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에 동참할 의향을 밝혔다.

PBP는 미국이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 중국의 관계 강화를 견제하려고 만든 협력체다.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 문구도 남중국해에서 인공섬과 군사기지를 만드는 중국을 겨냥한다.

물론 정상회담 후 윤석열 정부는 "PBP는 특정국(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하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에 대해서도 "중국에 초점을 맞춰 과녁을 겨냥하는 식의 해석은 피해 달라"고 했다(동아일보) 11월 17일치). 한미동맹 강화에 적극적이나, 여전히 경제적으로 긴밀한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더 협력하기로 선택했다. 그게 한국 자본주의의 이해관계에 더 낫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미·중 갈등에 한국이 더 깊이 얽히면서 그에 따른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윤석열은 미일의 대중·대북 압박에 더 협력하기로 결정해, 군사적 긴장 고조에 일조하고 있다

확장억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세 정상은 북핵 '위협'에 대응해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는데, 이는 한미일의 통합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이 진전할 것임을 가리킨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자고 한국에 계속 요구해 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도 이런 상황 속에서 체결된 것이었다.

이번 합의는 한일 지소미아 수준의 미사일 방어 협력을 뛰어넘자는 의미다. 한미일 군당국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 미사일 발사 탐지와 위치 확인 등을 유기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당장 동해에서 벌어졌던 한미일 연합 훈련이 더 자주 진행될 공산이 커졌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의 효용성도 더 높아질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런 협력을 강화하는 명분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는 조치도 될 것이다. 중국이 반발하며 상응하는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정상회담에서 북핵에 맞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확장억제는 핵우산을 확대한 개념으로,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이 그 구성 요소다.

이와 관련해 앞서 한미 군 당국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상시 배치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전략자산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 같은 핵무기는 물론이고, 핵추진항공모함 등 핵공격에 맞먹는 무기도 포함된다.

따라서 확장억제 강화는, 이런 가공할 무기가 앞으로 한반도와 그 주변에 더 자주 출몰할 것임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안보 협력은 불가피하고 협력 강화 자체가 성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 무기가 전진 배치되는 게 과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이는 북한을 자극해 핵과 미사일에 더 집착하게 만들고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뿐이다. 11월

17일 북한 외무상 최섉희는 담화를 내어 이렇게 밝혔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다." 18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중국도 자극받기는 마찬가지다. 중국의 코앞에 미국 전략무기가 빈번하게 오가는 것이니 말이다.

11월 11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역내 미군의 주둔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중국 측에 얘기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14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은 북한이 핵실험 등으로 긴장을 높이면 "우리 쪽에서 추가적인 방어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이런 움직임은 진행 중이다. 10월 31일 호주 방송사 ABC는 호주 북부 다윈에 미군의 B-52 폭격기 6대를 운용할 대규모 군사시설이 건설된다고 보도했다. B-52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다. 전략폭격기의 호주 배치는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행보다.

앞서 지난달에 공개된 새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핵무력 강화를 경계하며 두 개의 핵무장 강대국(러시아와 중국)에 맞서 핵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이 한국과 일본에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이런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 윤석열의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는 한반도를 강대국들의 핵무력 경쟁 위험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위험한 선택이다.

노동자 연대 TV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 민주당의 성격

11월 22일(화) 오후 8시 **발제 김문성** (최근 한국 현대사) 공저자

참가신청 bit.ly/1122-meeting